

청탁금지제도 운영 권역별 설명회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산·울산·경남지역

일시 : 2020. 7. 9.(목) 14:00~16:00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205호)

전북지역

일시 : 2020. 7. 16.(목) 14:00~16:00

장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운영 권역별 설명회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20.5.27.)에 따라 각급기관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고처리 유의사항 등을 전달

행사개요

- 권역별 일정

대상지역	일 자	장 소	비고
부산·울산·경남	'20. 7. 9.(목)	벡스코 컨벤션홀(205호)	부산
전북	'20. 7. 16.(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전주

- 참석대상 : 해당지역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청렴업무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및 위반사안 관련 판례, 신고처리 유의사항 등 제도 운영 전반 설명, 기관 의견 청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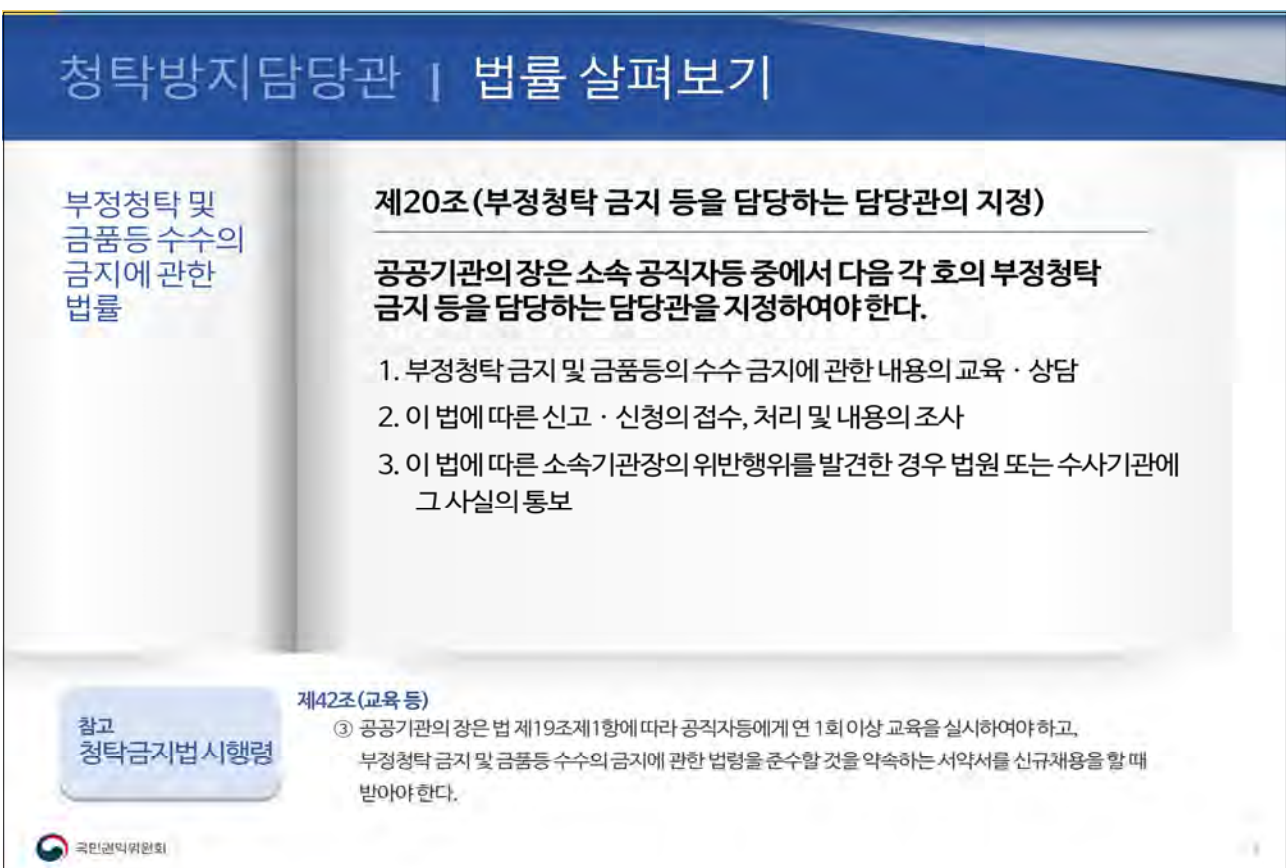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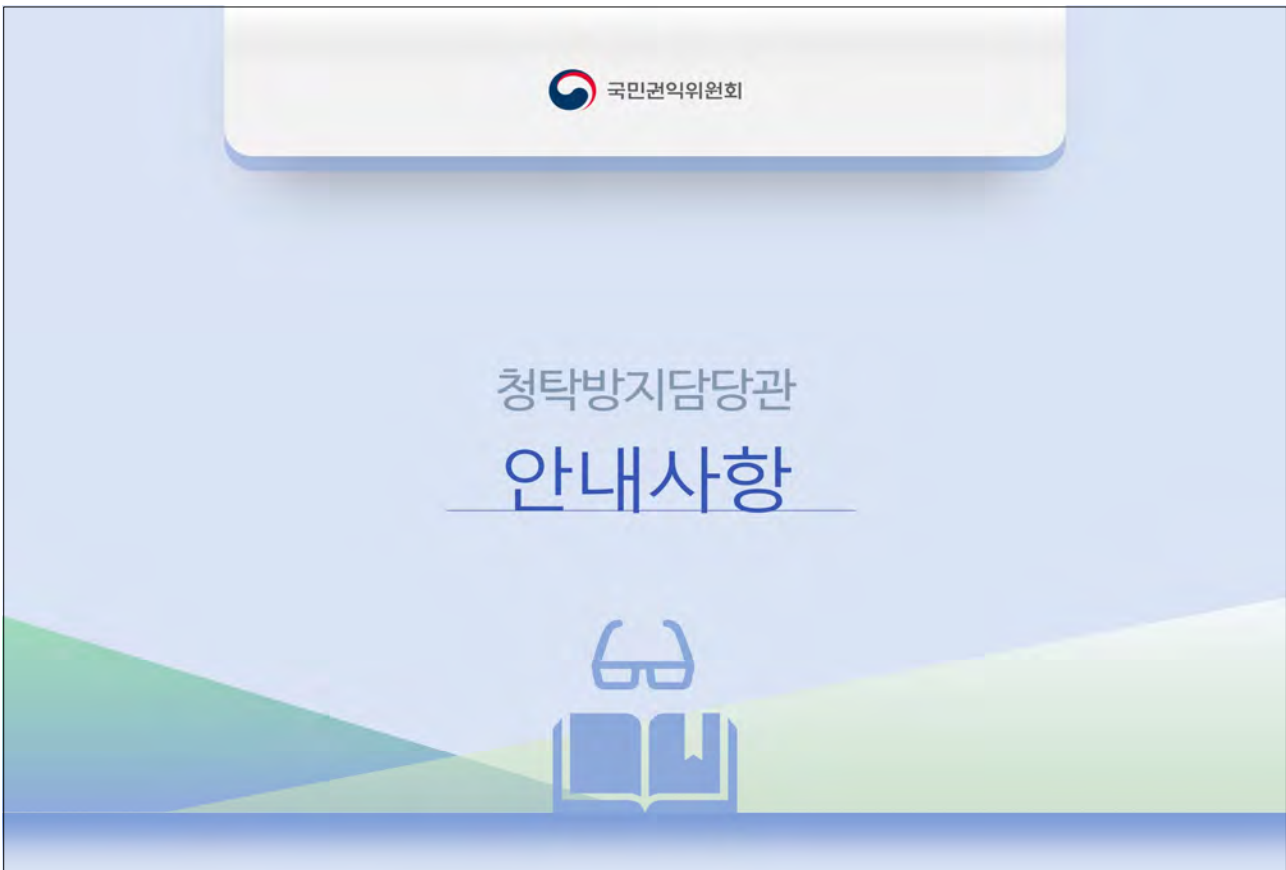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인사말씀	
14:10~15:05 55'	법령 개정 시행사항 및 주요 사례	
15:05~15:20 15'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15:20~15:40 20'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유의사항	
15:40~16:00 20'	질의응답, 의견청취	
16:00~	폐 회	

※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법령 개정 시행사항 및 주요 사례





청탁방지담당관 | 상담·교육 활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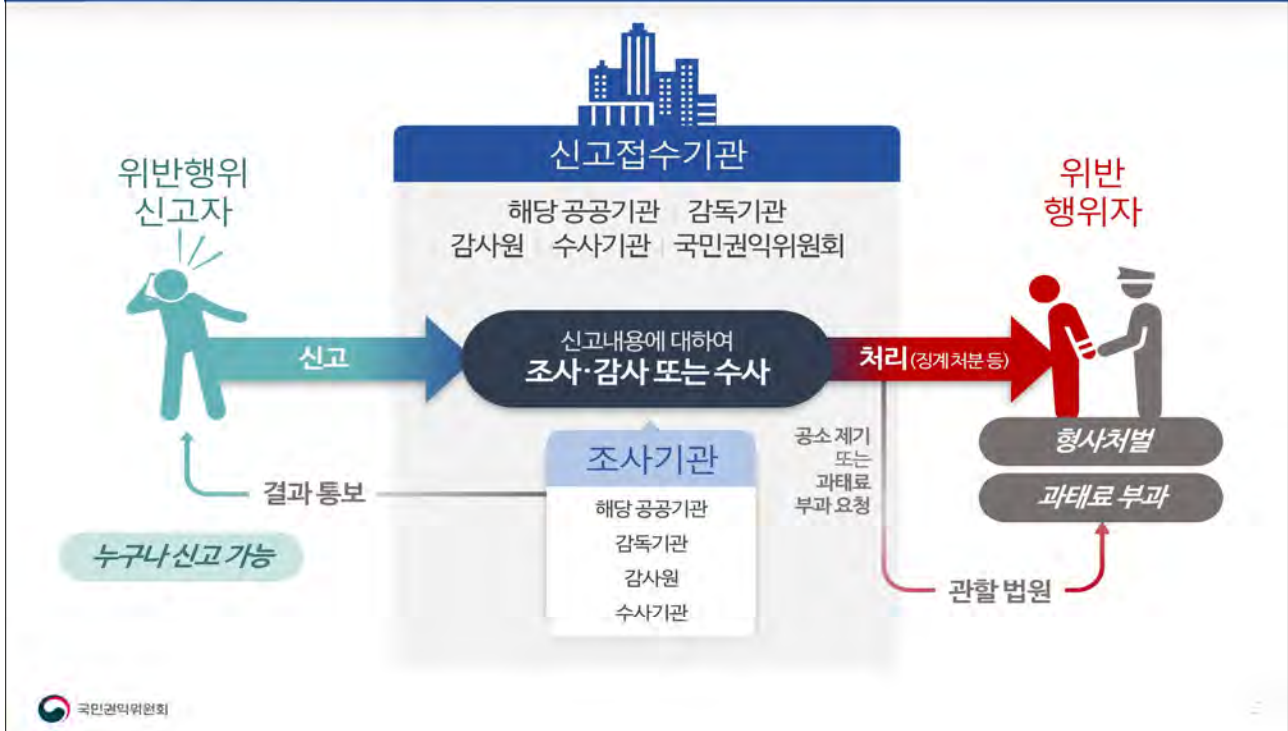
권익비전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4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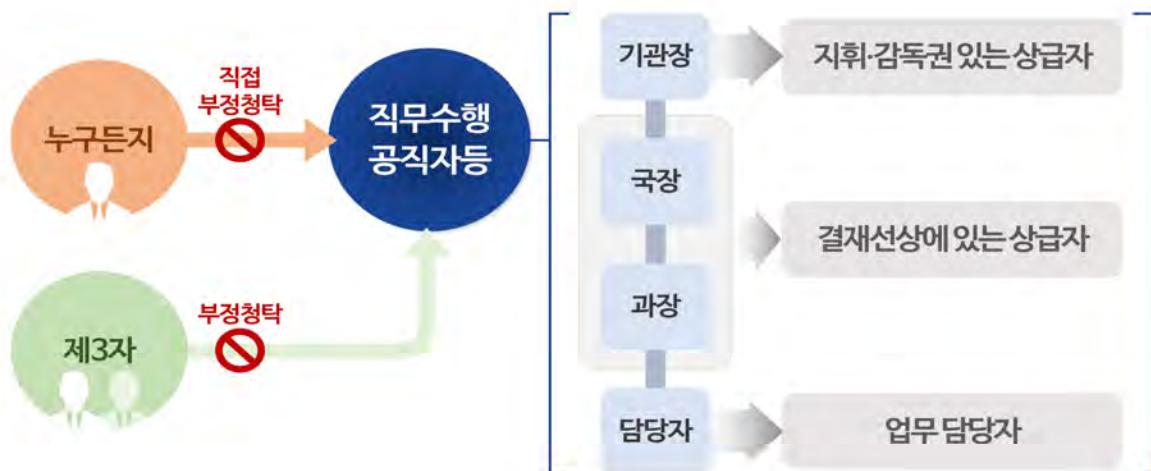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

- 1 위반사실 인지만으로도 조사 가능 여부
- 2 직무수행 공직자, 부정청탁자, 금품 제공자에 대한 조치
- 3 민간에 대한 조사 권한
- 4 적용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요청 주체
- 5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 6 처벌·처분 등 감경·면제 주체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 7 의무불이행시 제재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2)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2)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급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급자도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 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5)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가 액산정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 장치**로 기능



주요 판례 | 양벌규정

참고 판례 (2018과94)

인정 사실



공직자등이 감시제어반 제작, 구매, 설치계약을 체결한
업체대표이사로부터 1인당 18만원 상당의
향응(식사, 노래방)을 수수

판단



공직자등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업체 대표이사 및 업체는 각각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인
과태료 약 71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



제정 목적



적용대상

공직자등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민간

공무수행사인



지자체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수, 선생님, 기자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 법률 살펴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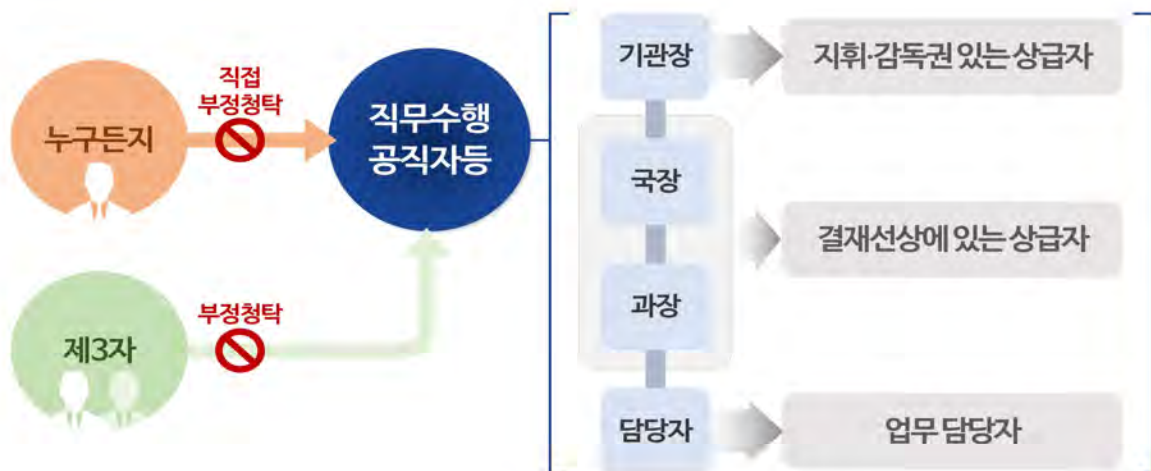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부정청탁금지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금지 |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부정청탁금지 | 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 '16.9.28.~'19.12.31. 동안 신고 접수 5,863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청 79명, 제재 확정 22명**

관련 사례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

법제5조제1항제9호 위반

- 시설 사용을 도운 공직자
벌금 100만원
- 객실사용을 청탁한 공직자들
각 과태료 10만원~50만원

경찰채용시험을 치른
자녀가 경찰인 부모를
통해 시험 감독자 2인에
답안지 보완 기회를 청탁

법제5조제1항제3호 위반

- 자녀
과태료 300만원
- 부모
과태료 800만원
- 시험감독자 2인
벌금 각 200만원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의 입학 청탁을
받고 특정 아동의 정원 외
입학을 실시

제5조제1항제10호 위반

- 학부모
과태료 500만원
- 교장
벌금 700만원
- 교감
벌금 500만원

주요 판례 |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

참고 판례

인정 사실



공직자가 하급자로부터 특정 직위로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근하급자에게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직근하급자는 인사담당자에게 희망 보직으로
지시하여 인사발령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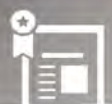


관리훈령 등에 따른 절차가 있음에도 **법 제5조제1항제3호**를 위반
한 부정청탁이며, 해당 공직자는 **평소 알아보라는 식으로
업무지시를 해왔기**에 **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 부과

주요 판례 | 계약 관련 부정청탁

참고 판례 (2018과2)

인정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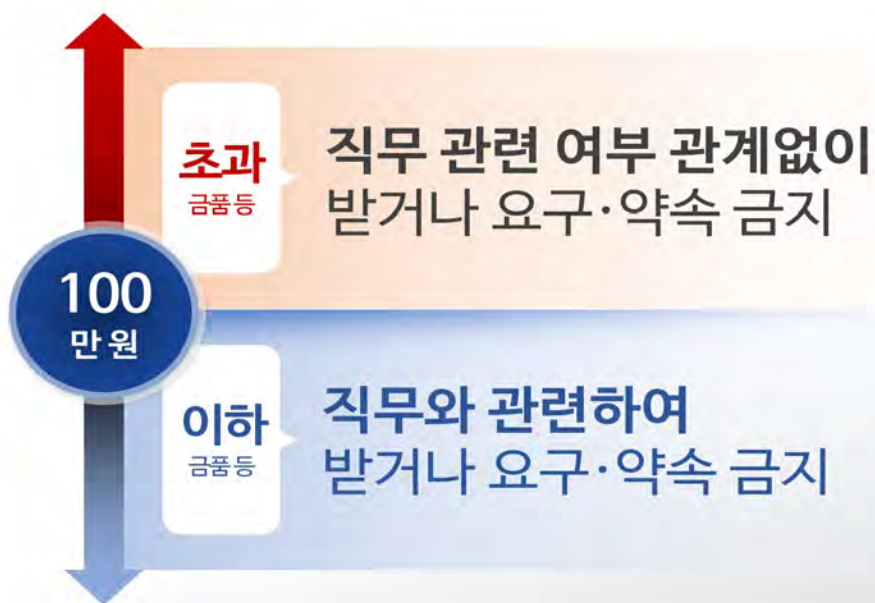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방제담당부서를 통해 회계부서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의 방제사업 구매 계약체결을
청탁하여 **수의계약 체결**

판단



지방의원 소유 회사는 수의계약체결 대상이 아님에도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위반에 따라 과태료**
1천5백만원 부과

금품등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OO 등은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드라마 ‘OO’의 공연제작사인 도OO의 대표이사인 윤OO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품등 수수금지 | 예외사유

- | | | | |
|---|--------------------------------------|---|-------------------------------------|
| 1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2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 3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4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 5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 6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 7 |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등 | 8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예외사유 제2호 | 음식물의 의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식사비 2만8천원을 몰래 지불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과태료 11만2천원 부과

3만원 외식상품권 제공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 유가증권은 선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정청탁금지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예) 상품권, 기프트콘, 관람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 아님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금지 | 유형별 분석

- ✓ 처리 현황 : **신고 접수 2,805건**,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1,661명**,
제재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확정 593명

관련 사례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장비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하여
공직자가 자진신고

법제8조제2항을 위반

- 제공한 업체 직원 및 업체
각 벌금 200만원

검수 담당 공직자에
수검 업체 직원이
**골프회원권으로
할인혜택 (3.3만원 상당)을
제공**

법제8조제2항을 위반

- 공직자·수검 업체 직원
각 과태료 3배 (10만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9만원 상당 농수산물
선물을 택배로 보내
교사가 자진신고**

법제8조제2항을 위반

- 학부모
과태료 3배 (27만원)

주요 판례 | 식사 관련

참고 판례 (2017과97)

인정 사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지도, 관리 담당
공직자와 조합 임직원들 21명이
함께 60만원 상당의 식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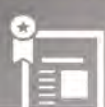


조합 구성원을 지도·관리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문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견 교류가 가능**하고,
식사장소를 보아 **공직 모임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식비를 개별로 계산하여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위반자에 과태료 6만원 부과

주요 판례 | 선물 관련

참고 판례 (2017과1957)

인정 사실



사무소 소장이 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및 사무국장들에게
설 선물로 각 1.5만원 상당 한과세트 제공

판단



위반자는 미풍양속에 따른 설 선물이라고 주장하나,
위원장으로부터 회계처리 부적정, 근무상황관리 미흡에
관하여 **주의를 받은 점**, 위반자와 위원장 등의 지위·관계를 볼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요 판례 | 경조사비 관련

참고 판례 (2019과213)

인정 사실



사업소에서 재직하는 공직자가 장남 결혼식에서
계약실적이 있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각 10~50만원)을 수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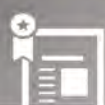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아
위반자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주요 판례 | 사적 노무 요구 관련

참고 판례 (2018과1)

인정 사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긴 업체에게 종중의 묘를 벌초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판단



주변환경 정비 용역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지위에서
용역계약업체 인부 2명이 3시간 가량 공직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하여 **인부임인 15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위반자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주요 판례 | 금융이익 관련

참고 판례 (2019과96)

인정 사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들의 직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수개월~수년 뒤 변제

판단



공직자는 총 약 29만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58만원 부과

주요 판례 | 국외출장 지원 관련

참고 판례 (2019과1427)

인정 사실



공직자등 3인이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관련 업체들과 동행하여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222만원 상당을 수수

판단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약 756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직자등 3인은 **3/7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약 102만원만을 업체에 지급하여 **각 7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태료 약 222만원 부과

주요 판례 | 수수금액 산정

참고 판례 (2017과215)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시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들과 J조합 임직원들 22명으로서
함께 63만3천원 상당의 식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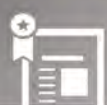


방에서는 의원들과 조합장 및 간부 16명 : 54만 1천원(33,812원)
홀에서는 의원들 수행원과 축협 팀장 등 6명 : 9만 2천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이며,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에 과태료 7만원 부과

주요 판례 | 제공자 가액 산정

참고 판례 (2018과38)

인정 사실



보호소 직원 40명이 각 1.5만원씩 각출하여
보호소장에게 60만원 상당 가디건과 한우세트를 제공

판단



위반자(직원)들이 **각출한 금액**,
다른 위반자가 법원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물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과태료 각 5만원 부과

외부강의 등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해당 사례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 · 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의결 등
-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 · 간담회 등의 좌장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신문 · 잡지에 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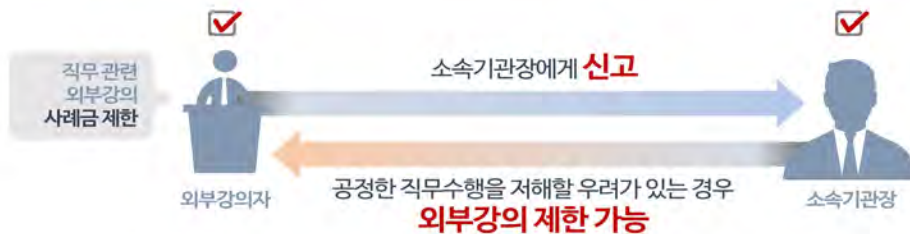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시험문제 출제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언론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 자문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외부강의 등 |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변경사항

법 개정 ('20.5.27 시행) 에 따라,

1. 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등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2. 사전신고 →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로 변경

외부강의 등 |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렴한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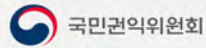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은밀성

“신고활성화를 위한” 보호·보상제도

보호 - 공익신고자보호법 준용

보상·포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신고유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 여부



1. 보호 | 개요



1. 보호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도

신고자·협조자 비밀 보장 제도



신분노출 금지

- 누구든지 노출 금지
- 인적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4항)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등 누설 금지
- 신고 처리 업무 수행 과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1.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 사항

상담, 신고 접수 등 단계에서 비밀보장 위반 유의

- ✓ 감사부서 담당자 등 관련자는 접수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등 조치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신고자 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

1.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 사항

사건 조사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 ✓ 접수 경로를 막론하고 모든 민원에 부패(공익)신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부패(공익) 신고에 준하여 처리
-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임의 노출 · 공개 · 보도 되지 않도록 유의
- ✓ 신고자 연락 시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조사결과 등 통지
- ✓ 현지조사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신고 관련 서류를 휴대하지 말고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 요약하여 참조

1. 보호 |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 호 요청



신변보 호방 법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 동행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1.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및 보호조치

신고자·협조자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파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신분상, 근무상 불이익 조치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 강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 및 징계 등 부당 인사 조치
- 전보, 직무미부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급 등 차별, 자기계발 기회 취소, 부당 감사 등
- 블랙리스트 작성, 폭행 또는 폭언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1.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및 보호조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조치 사례

사례
1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점수 조작 지시
신고

기관
내부직원

신고자 보호조치

“해임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요구
-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사례
2

파견계약을 맺은 회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 신고

파견업체
직원

신고자 보호조치

“계약해지 취소”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 피신청인인 회사에 계약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 권고

1. 보호 | 책임감면

책임감면



형,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 신고 관련 발견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계, 행정 처분 시 권익위감면 요구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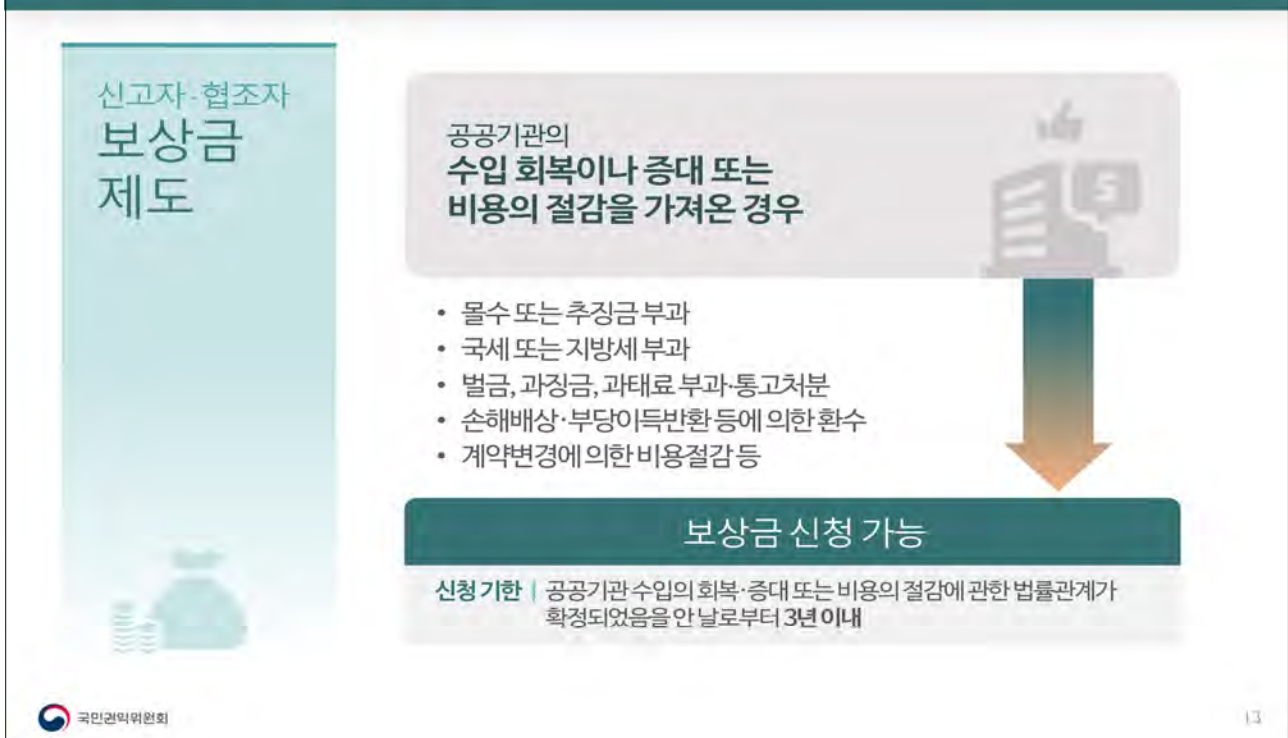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 피신고자가 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어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2. 보상 | 개요



2. 보상 | 보상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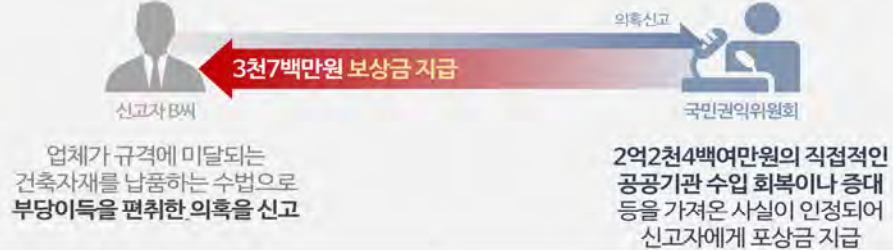


보상금 지급 사례

사례 1



사례 2



2. 보상 | 포상금 제도

신고자·협조자
포상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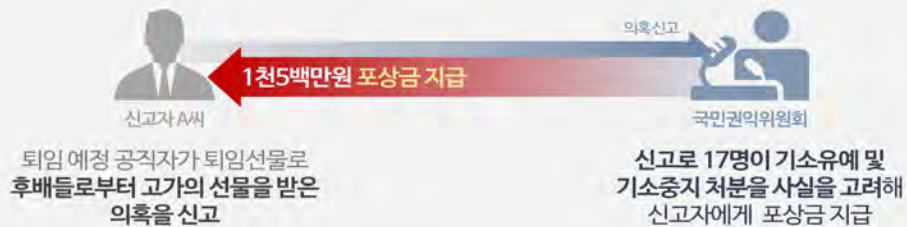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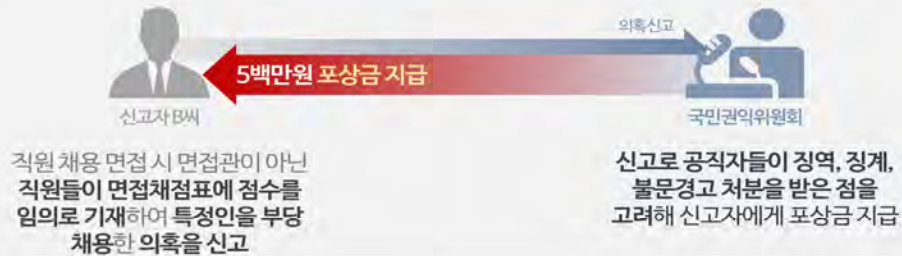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
1



사례
2



국민권익위원회

3. 보호·포상제도 관련 공공기관 유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발송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내부신고자 색출 및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국민권익위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12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유의사항







